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98호 2021. 5. 17.(월)

공 고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 2021-871 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4.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관내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에 따라 통 분할과 하부 반 신설 등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 대상 지역 및 조정 사유

대상 지역	조 정 사 유
산정동	- 세대수 과밀에 따른 통반 조정

- 조정 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조정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목포시	619	2,677	620	2,681	증1	증4	
산정동	28	112	29	116	증1	증4	- 세대수 과밀에 따른 통반 조정

3. 규칙 개정안 : 별첨

4.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제2조(하부조직)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5. 예산사항 : 4,680천원

- 통장수당 : 1명 × 4,680,000원 = 4,680,000원 ※ 1년 기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7. 규제심사(심의)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기 간 : 2021. 5. 17.(월) ~ 2021. 6. 7.(월)(22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7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산정동 통·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동 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산정동	28	1	양을로79번길 6, 101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	양을로79번길 6, 102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3	양을로79번길 6, 103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4	양을로79번길 6, 104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9	1	양을로79번길 6, 105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	양을로79번길 6, 106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3	양을로79번길 6, 107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4	양을로79번길 6, 108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 명	개정 전			개정 후		
	통명	반명	관할구역	통명	반명	관할구역
산정동	28	1	양을로79번길 6, 101, 102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8	1	양을로79번길 6, 101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	양을로79번길 6, 103, 104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	양을로79번길 6, 102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3	양을로79번길 6, 105, 106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3	양을로79번길 6, 103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4	양을로79번길 6, 107, 108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4	양을로79번길 6, 104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9	1	신설	29	1	양을로79번길 6, 105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2	신설		2	양을로79번길 6, 106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3	신설		3	양을로79번길 6, 107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4	신설		4	양을로79번길 6, 108동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1 - 879호**입 법 예 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7.

목 포 시 장**1. 개정이유**

-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 분장사무 정비를 통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가.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운영 근거규정 신설 (안 제34조제2항)**

- 보건소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기계설비법」시행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안 제31조제71호~74호)**3. 개정 규칙안 : 붙임****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 (개방형 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 관련부서 의견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7. ~ 2021. 5. 23.(6일간)

9.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71호부터 제7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72.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7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74. 기계설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축행정과) 건축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 7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31조(건축행정과) ----- -----. 1. ~ 70. (현행과 같음) <u>7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u> <u>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u> <u>72.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u> <u>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u> <u>7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u> <u>관한 사항</u> <u>74. 기계설비법 위반사항에 대한</u> <u>과태료 처분</u>
제34조(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 <u>관으로 보한다.</u>	제34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기술 <u>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u>「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u> <u>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u> <u>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u> <u>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u>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p>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input type="checkbox"/>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p>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과·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단·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 계 법 령	내 용
□ 지방공무원법	<p>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p> <p>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p> <p>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p> <p>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p>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임용권자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21 - 880호**입 법 예 고**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7.

목 포 시 장**1.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21.6.1.)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 사무’를 동장에 위임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사무와 함께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효율 및 신고인 편의를 도모
- 그 밖에 사무위임 근거 법령 및 규정 수정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동장 위임사무 신설 (안 별표2)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나. 사무위임 근거 법령·규정 명칭 및 조항 수정 (안 별표2)

- ▶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인감증명법』 전부·일부 개정에 따른 명칭 및 근거 조항 수정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인감증명법」

6. 관련부서 의견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7. ~ 2021. 5. 23.(6일간)

9.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439,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	동 장
	2. 기록물 관리 및 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3조	동 장
민원봉사실	1. 삭제 <2000·9·8>	삭제 <2000·9·8>	삭제 <2000·9·8>
	2.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제14조의4	동 장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무		동 장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교부	"	
	③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④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확인서의 교부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사항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소 관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임기관	소 관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사무관리규정 제5호	동 장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	동 장
	2. 기록물 관리 및 폐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2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7조	동 장		2. 기록물 관리 및 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3조	동 장
민원봉사실	1. 삭제 <2000·9·8>	삭제 <2000·9·8>	삭제 <2000·9·8>	민원봉사실	1. 삭제 <2000·9·8>	삭제 <2000·9·8>	삭제 <2000·9·8>
	2.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동 장		2.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제14조의4	동 장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무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의 교부 ③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④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산)의 교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	동 장 동 장

붙임**관계법령****【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편철 및 관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집·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를 기입한다.

③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과제 식별번호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물 분류기준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심사 및 심의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동종(同種)·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후에 평가해야 한다.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보존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